

지방자치·종합

광주 동구청장 보궐 선거전 본격화

민주 예비후보 3명 등록... 경선방식·공천 촉각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보궐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일부 입지자들은 선관위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선거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일부는 민주통합당 경선 방식 및 공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회 부의장·양혜령(50·치과의사) 씨 등 3명이다. 오형근 예비후보는 동구 학동에, 양혜령 예비후보는 금남로 전일빌딩에 각각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창당 예비후보자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오형근·신이섭·양혜령 예비후보를 비롯한 홍기월(51) 동구의원, 문인선(63) 전 조선이공대 교수, 조영복(64) 전 동구의회 의장, 최정완(62) (사)중앙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문서(49) 법무사, 반강환(62) 광주 동부신협 이사장 등 총 9명이었다.

자격을 부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동구청장 보궐선거 2차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 예비후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준하 의문사 증인채택 요구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준하 의문사 제출자료를 쌓아놓은 채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MB 측서 먼저 BKK 설립 제안”

김경준 자서전 오늘 출간... “박근혜 측에선 조기 귀국 촉구”

2007년 대선 직전 정국을 뒤튼든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46)씨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BBK 설립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의 지인이 8일 밝혔다. 최근까지 김씨와 편지를 주고받은 지인에 따르면 현재 천안고도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이뤄진 경우, BBK 설립 과정 등 그동안 BBK의 흑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를 담은 “BBK의 배신”이란 자서전을 9일 발간한다.

나인 에리카 김의 주선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보고 이 대통령 측에서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그는 김 전 총무기획관의 전화를 받고 며칠 뒤 서울 서초동 모 연구원 건물에서 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고 이 대통령은 첫 대면 자리에서부터 인터넷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김씨는 2007년 대선 경선 직전에는 각 후보 캠프에서 자신을 희유한 내용도 자서전을 통해 풀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는 차관급 인사가 찾아와 자신에게 귀국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인터넷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데 금융전문가이니 함께 인터넷 금융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후 구체적인 도입을 논의하면서 수의 모델이 불확실한 인터넷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투자문사를 설립해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재직 중이던 때였다. 그동안 김씨와 이 대통령의 만남은 김씨의 누

반대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집요하게 자신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기억했다. 박 후속 측 이해관계자도 김씨를 수의 모델이 불확실한 인터넷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투자문사를 설립해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설립한 투자문사가 바로 BBK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시민단체 '투표시간 연장 시민행동' 출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10개 시민단체는 9일 오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행동'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로 투

표하고자 하는 이들은 불편과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역 시민사회는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행동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 청년연대, 민주노총 광주지부, 한국노총 광주지부 등이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불법도급 택시 근절 광주 대책위 결성

불법도급 택시 근절을 위한 광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된다. 광주시의회 강은미 의원이 8일 “불법도급 택시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와 결성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지난 5일 모임을 열고 시민·사회

단체,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광주시에 불법도급 택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지속적인 택시발전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토론회를 거쳐 불법도급 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 도입을 광주시에 촉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실업급여 수급자 줄었지만 부정수급 급증

주영순 의원 지적



원, 미환수액이 162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부정수급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한 사건은 조속히 조사해 환수해야 하는데, 전담 인원이 처리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광천노동구)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감소했지만 부정수급자는 되레 늘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4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120만명으로 3% 감소했지만, 부정수급자는 2만5677명에서 2만7337명으로 오히려 7%나 늘었다. 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편적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한 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 결정액 가운데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47억

원, 미환수액이 162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부정수급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한 사건은 조속히 조사해 환수해야 하는데, 전담 인원이 처리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산하 47개 지청의 실업급여 담당자는 141명으로 한 지청당 평균 3명 수준이며, 그나마 30명은 타 업무 겸직 인원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자까지 포함해 141명의 부정수급 담당자가 지난해 처리한 부정수급 처리건수는 25만 6000여건으로 1인당 월간 1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o@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Table with 12 columns: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It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judgments.

판사 이동기 2012년 10월 02일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판사 최창훈 2012년 10월 02일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